

1. 연령별 가계부채 상황 및 평가

1. 검토 배경
2. 연령별 가계부채 현황
3. 고연령층 가계부채의 누증요인
4. 고연령층 가계부채의 잠재리스크 점검
5. 시사점

1. 검토 배경

2019년 현재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추계인구 기준)이 14.9%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앞으로도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¹⁾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실물·금융부문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2015년부터 베이비붐세대(55~63년생, 2018년 인구총조사 기준 전체 인구 대비 14.0%)가 60대에 진입하고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고연령층의 부채·자산 보유행태 및 재무건전성 변화가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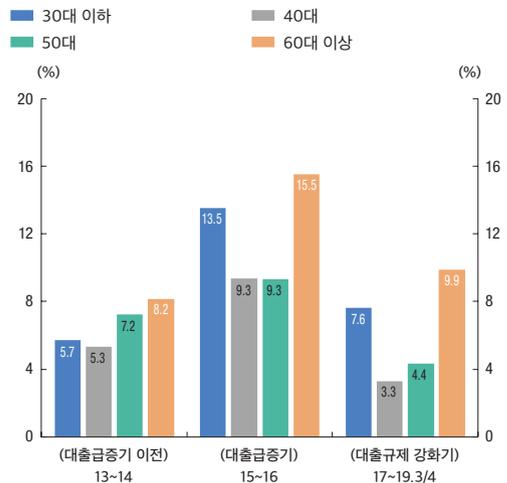
따라서 본고에서는 가계부채DB(차주 기준) 및 가계금융·복지조사(가구 기준)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연령별 가계부채 상황을 살펴보고 고연령층 가계부채의 누증요인과 이에 따른 잠재리스크를 점검하였다.

2. 연령별 가계부채 현황

가. 가계대출 수준

2017년 이후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모든 연령층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대출 급증기(15~16년)에 비해 둔화되었으나 60대 이상은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2017~19년 3/4분기 중 대출 증가율(연평균)을 보면 40대가 3.3%로 가장 낮았고 60대 이상이 9.9%로 가장 높았다(그림 1-1). 이에 따라 전체 가계대출에서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²⁾³⁾은 2014년 이후 매년 평균 0.5%포인트씩 누적되면서 2019년 3/4분기 말 18.1%(60대 13.2%, 70대 이상 4.9%)에 달하게 되었다. 한편 같은 기간중 30대 이하의 점유비중은 23.6%에서 25.5%로 상승하였으며 40대(32.8% → 29.1%)와 50대(28.8% → 27.4%)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2).

그림 1-1. 가계대출 증가율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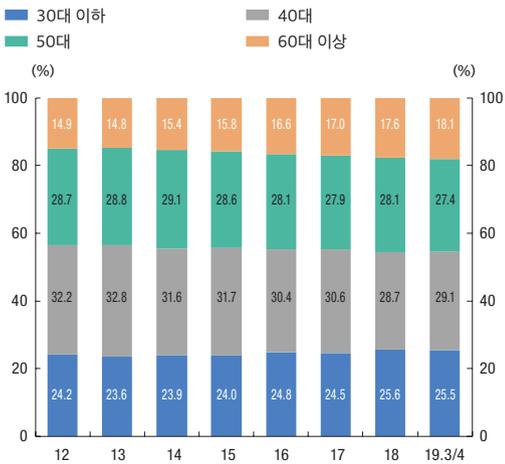


주: 1) 기간중 연평균(19년 3/4분기말은 전년동기대비)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 1) UN은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중에 따라 고령화 정도를 고령화사회(7% 이상), 고령사회(14% 이상), 초고령사회(20% 이상)로 분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025년경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 2) 가구 기준(가계금융·복지조사)으로도 60대 이상의 금융부채 보유 비중이 2013년 15.4%에서 2018년 20.4%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3) 이에 근거하여 가계대출(가계신용통계 기준, 판매신용 제외, 이하 동일) 보유 규모를 연령별로 시산해 보면, 2019년 3/4분기 말 30대 이하의 377.1조원(30대 미만 62.8조원, 30대 314.3조원), 40대는 430.6조원, 50대는 405.5조원, 60대 이상은 268.4조원(60대 195.3조원, 70대 이상 73.1조원)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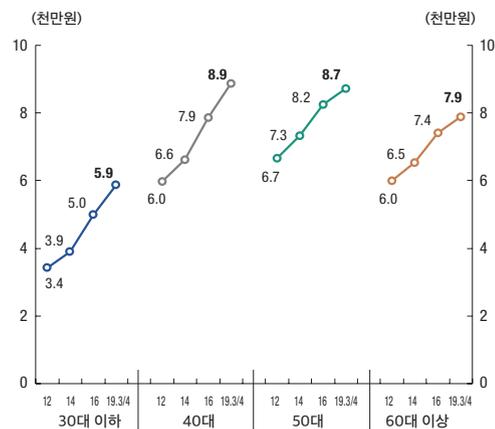
그림 1-2. 가계대출 비중¹⁾



주: 1) 전체 가계대출 대비, 기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차주 1인당 대출금액은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한 가운데 2019년 3/4분기말 60대 이상이 7.9천만원으로 30대 이하(5.9천만원)에 비해 높고 주된 경제활동계층인 40대(8.9천만원)와 50대(8.7천만원)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을 보였다(그림 1-3).

그림 1-3. 차주 1인당 가계대출금액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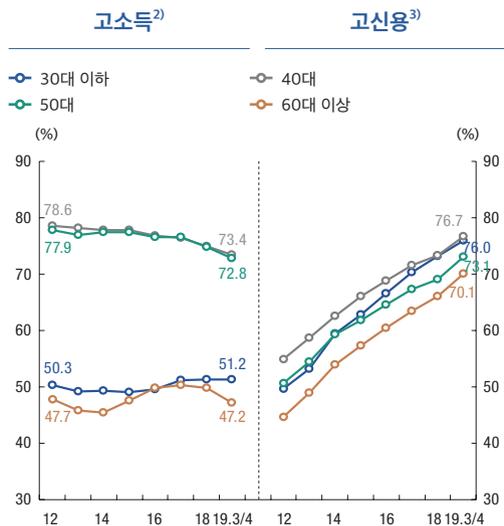


주: 1) 기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나. 차주특성별 대출 분포

차주특성별로 보면 고소득자(상위 30%) 대출 비중은 연령층 간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다. 40~50대는 동 비중이 70% 이상의 높은 수준에서 하락세를 이어간 반면 30대 이하와 60대 이상은 50% 내외 수준에서 등락하였다. 고신용자(1~3등급) 대출 비중은 모든 연령층에서 빠른 상승세를 지속하였다. 한편 60대 이상은 여타 연령층에 비해 고소득·고신용자 비중이 가장 낮은 수준(19년 3/4분기말 47.2%, 70.1%)을 유지하였다(그림 1-4).

그림 1-4. 고소득·고신용 가계대출 비중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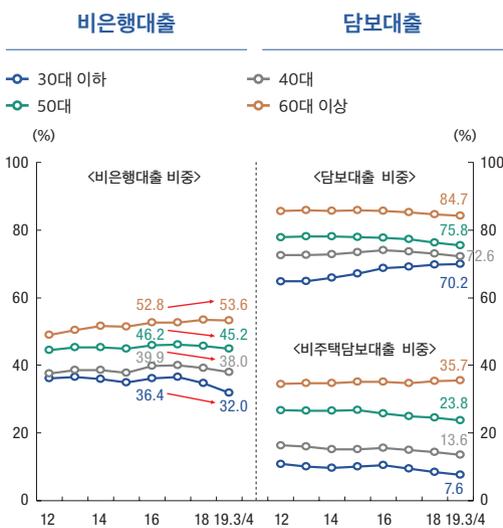
주: 1) 연령별 가계대출 대비, 기말 기준
 2) 소득수준 상위 30%
 3) 신용등급 1~3등급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다. 금융업권별 및 대출종류별 대출 분포

금융업권별로 보면 60대 이상은 다른 연령층과 달리 2017년 이후 비은행대출 비중이 높아졌다(16년말 52.8% → 19년 3/4분기말 53.6%). 대

출종류별로는 모든 연령층에서 담보대출 비중이 70% 이상인 가운데 60대 이상⁴⁾이 84.7%(19년 3/4분기말)로 가장 높았다(그림 I-5).

그림 I-5. 비은행 및 담보대출 비중¹⁾



주: 1) 연령별 가계대출 대비, 기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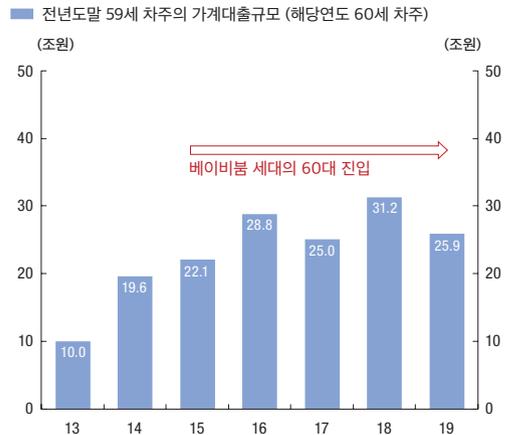
3. 고연령층 가계부채의 누증요인

60대 이상 고연령층의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은 차주의 고령화 영향이 커진 가운데 노후소득 확보를 위한 대출수요의 꾸준한 증가, 원금상환을 통한 대출상환 제약 등으로 생애주기에 맞는 부채축소(deleveraging)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데 주로 기인한다.

가. 차주의 고령화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가 60대에 본격적으로 진입함에 따라 고연령층 대출규모가 빠르게 확대되었다. 60대에 신규로 편입되는 차주의 대출규모가 2013년 10.0조원에서 2015년에는 20조원을 상회하기 시작하여 이후 25조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그림 I-6). 동 규모는 2016년 이후 60대 이상 연간 신규차입액의 절반 이상⁵⁾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그림 I-6. 차주의 고령화에 따른 60대 이상 가계대출 확대효과¹⁾



주: 1) 해당연도별 60대 이상 대출로 편입되는 규모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4) 60대 이상은 상가, 오피스 등 주택 이외 담보대출 비중도 35.7%(19년 3/4분기말)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노후소득 확보를 위한 차입수요 증가

차주의 고령화에 따른 부채규모 확대 이외에도 노후소득 확보를 위한 차입수요가 지속되면서 이들 연령층의 부채축소가 지연되었다. 2013년 이후 60대 이상의 신규차입액은 꾸준히 증가(연평균 5.3%)⁶⁾해 왔다. 이는 기대수명 연장 등으로 노후준비 필요성⁷⁾이 커진 상황에서 임대 부동산 투자 및 자영업 진출 등을 위한 차입수요가 확대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① 임대부동산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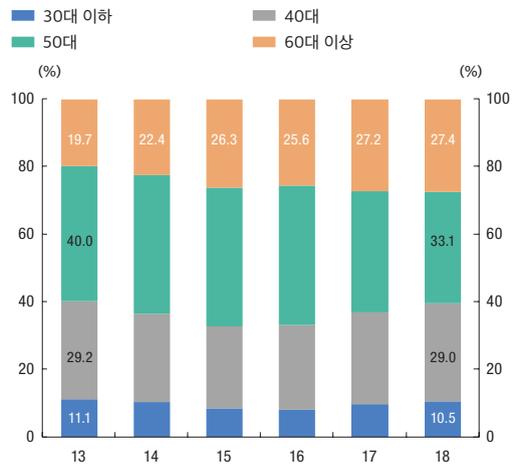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13년 이후 60대 이상의 부동산임대가구⁸⁾와 이들 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가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대비 2018년 부동산임대가구 수를 보면 60대 미만은 33.9만가구 감소하였으나 60대 이상은 48.6만가구 증가(연평균 7.0%)하였다(그림 I-7). 이는 전체 고연령가구의 증가속도(연평균 5.4%)를 상회⁹⁾하고 있어 신규로 임대부동산 투자에 나선 가구가 적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이에 부동산임대가구 보유 금융부채중 60대 이상의 점유 비중도 2013년 19.7%(51.3조원)에서 2018년 27.4%(103.4조원)로 상승하였다(그림 I-8).

그림 I-7. 부동산임대가구 수



자료: 2013~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그림 I-8. 부동산임대가구 금융부채 비중¹⁾



주: 1) 전체 부동산임대가구 금융부채 대비
자료: 2013~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5) (59세→60대 이상) 대출편입액/60대 이상 연간 신규차입액(추가대출 포함)

연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비율	24.9%	46.1%	37.5%	53.6%	51.2%	62.9%

- 6) 2013~19년(19년은 3/4분기말 연율 기준)중 연평균 신규차입액 증가율: 30대 이하 7.2%, 40대 3.5%, 50대 4.4%, 60대 이상 5.3%
- 7) 고령자 통계(통계청)에 따르면 노후 생계비를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2010년 18.4%에서 2018년 24.9%로 상승하였고, 사회동향조사(통계청)에서도 부모 노후 돌봄 주체에 대해 '스스로 해결'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같은 기간중 12.7%에서 19.4%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8) 본고에서는 2013~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임대보증금 부채 또는 임대소득 보유가구중 임대부동산(주택<다세대·다가구주택 포함>, 상가, 오피스 등)이 있는 가구를 부동산임대가구로 정의하였다.

② 창업 등 자영업 진출

또한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및 퇴직 등에 따른 창업 증가로 관련 차입수요가 꾸준히 확대되었다. 60세 이상 자영업자 수(경제활동인구 조사 기준)는 2012년 8월 141.4만명에서 2019년 8월 176.5만명으로 35.1만명 증가¹⁰⁾하였다. 반면 60대 미만은 같은 기간중 53.5만명 감소(443.2만명 → 389.7만명)하였다. 자영업자 보유 가계대출 중 60대 이상 비중도 2012년말 16.0%(18.9조원)에서 2019년 3/4분기말 21.7%(50.4조원)로 상승하였다(그림 I-9).

그림 I-9. 자영업자 가계대출¹⁾ 비중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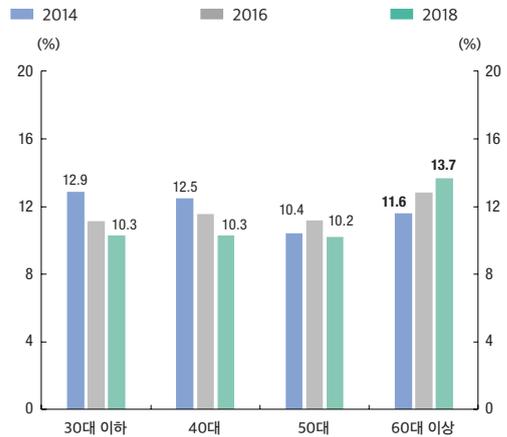


주: 1)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의 가계대출(기업대출은 제외)
 2) 전체 자영업자 가계대출 대비, 기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③ 기타 생활자금 마련 필요성

아울러 고연령층의 경우 노동시장 이탈 및 고용 불안정성¹¹⁾ 증대, 경기 둔화에 따른 자영업 업황 부진 등으로 소득여건이 악화되면서 생계 유지를 위한 대출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금융부채에서 생계형 부채¹²⁾가 차지하는 비중(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이 60대 이상은 상승(14년 11.6% → 18년 13.7%)한 반면 다른 연령층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10).

그림 I-10. 생계형 부채 비중¹⁾



주: 1) 연령별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금융부채 대비
 자료: 2014~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9) 2014~18년중 연령군 가구 수 증가율(가계금융·복지조사, 추계가구 기준)

60대 미만		60대 이상	
부동산임대가구	전체가구	부동산임대가구	전체가구
-3.0%	0.1%	7.0%	5.4%

10) 2019년의 경우 60대 이상 자영업자 증가율(5.8%)은 인구 증가율(5.1%, 추계인구 기준)보다 높고 60대 미만(-2.9%, 15세 이상)은 인구 증가율(-0.9%, 15세 이상)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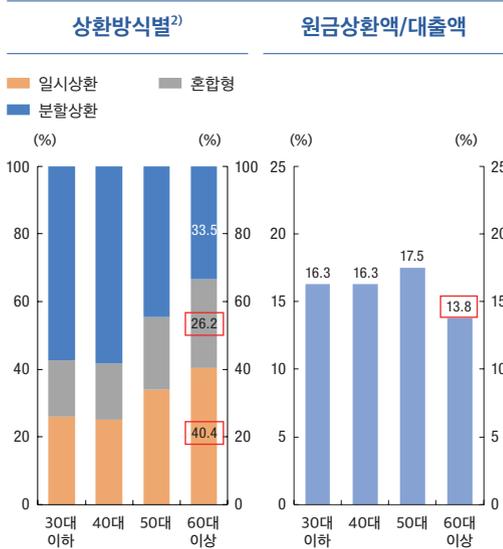
11)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19년 5월)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일자리는 임시·일용직 비중이 32.7%로 나타났다.

12) 생계형 부채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본고에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생활비 용도 대출, 신용카드 사용액(의상 및 할부판매) 및 관련 대출 등에 한정하여 이를 시산하였다.

다. 원금상환을 통한 부채축소 제약

한편 대출구조 측면에서 보면 60대 이상은 일시상환방식 대출 비중이 높아¹³⁾ 원금상환을 통한 부채축소가 상대적으로 부진하였다. 60대 이상의 대출중 일시상환방식이 40.4%(일부 만기상환 포함 시 66.6%,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60대 이상의 대출액 대비 원금상환액 비중은 13.8%로 다른 연령층(16.3~17.5%)에 비해 3%포인트 정도 낮았다(그림 I-11).

그림 I-11. 상환방식별 대출 비중¹⁾ 및 원금상환액/대출액 비중¹⁾



주: 1) 연령별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대출 대비

2) 일시상환: 전액 만기상환, 혼합형: 일부 만기상환, 분할상환: 균등상환
자료: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4. 고연령층 가계부채의 잠재 리스크 점검

고연령층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해 왔으나 이들 연령층의 전반적인 재무여력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60대 이상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은 여타 연령층에 비해 낮은 편이다(표 I-1).

표 I-1. 총부채¹⁾/총자산 비율²⁾

연령층	총부채/총자산 비율 (%)
30대 이하	31.8
40대	28.3
50대	24.3
60대 이상	22.8
70대 이상	(19.3)

주: 1) 임대보증금 포함

2) 금융부채 보유가구 기준

자료: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다만 이들 연령층은 소득 측면에서의 레버리지가 높고 금융자산에 의한 채무대응능력이 떨어지는 데다 최근 건전성 저하 조짐이 일부 나타나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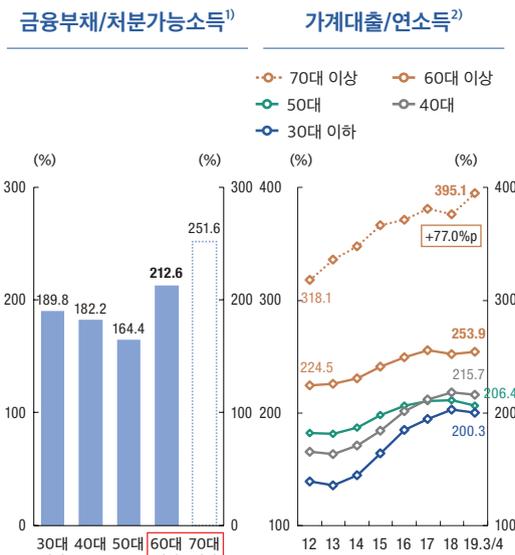
가. 소득 대비 높은 부채 수준

고연령층은 소득 대비 부채 수준이 높아 채무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60대 이상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은 212.6%(70대 이상 251.6%)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차주(가계부채DB) 기준으로도 60대 이상의 연소득 대비 대출(LTI) 비율이 높은 수준에서 상승

13) 이는 2014년 분할상환대출 확대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이전에 일시상환방식으로 차입한 담보대출(비주택담보대출 포함)이 많은 데다 동 대출이 기존 상환방식대로 만기연장 또는 대환 등으로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70대 이상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그 수준(19년 3/4분기말 395.1%)이 가장 높고 상승폭(12년말 대비, +77.0%포인트)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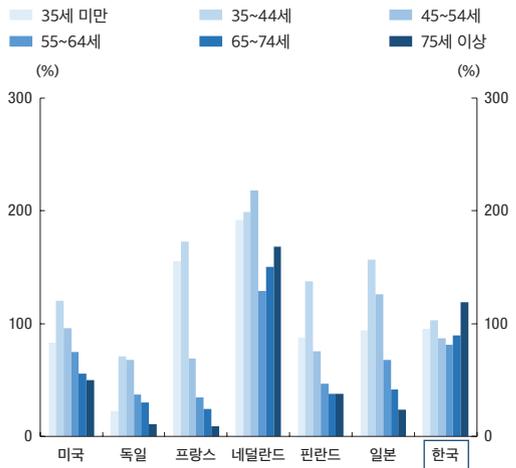
그림 I-12. 소득 대비 부채 수준



주: 1) 금융부채 보유가구 기준
2) 가계대출 차주 기준
자료: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은행(가계부채DB)

주요국과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나라 고연령층의 소득 대비 부채 수준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미국, 프랑스, 일본 등은 대체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낮아지는 반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¹⁴⁾에서 동 비율이 다시 높아지는 모습이다(그림 I-13).

그림 I-13. 주요국과 부채/소득 비율 비교¹⁾



주: 1) 중위값 및 총(경상)소득, (금융)부채 보유가구 기준
(다만 일본은 10세 단위로 연령 구분, 평균값)
자료: 가계금융 관련 조사
(미국 16년, 독일·프랑스 등 17년, 일본 14년, 한국 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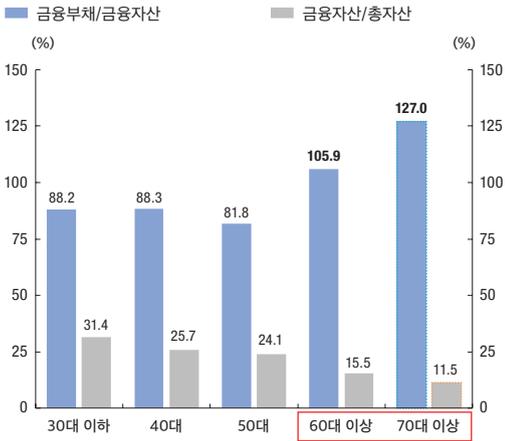
나. 실물자산 편중으로 금융자산에 의한 채무대응능력 취약

총자산 측면에서 보면 고연령층의 채무대응능력은 양호한 편이지만, 금융자산 측면에서는 여타 연령층에 비해 열위하여 경기 및 부동산시장 위축시 이들의 채무상환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

60대 이상은 금융자산보다 실물자산을 더 많이 보유함에 따라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이 100%를 초과하는 등 여타 연령층(81.8~88.3%)에 비해 크게 높은 편이다(그림 I-14). 이에 따라 소득 및 금융자산 측면에서 채무대응능력이 취약¹⁵⁾한 가구의 부채 비중을 시산해 본 결과, 60대 이상이 22.1%(여타 연령층 15.9~16.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I-2).

14)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우리나라(자금순환통계 기준, 18년말 184.2%)보다 더 높은 네덜란드(18년말 239.5%)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65세 이상에서 레버리지 수준이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15) 본고에서는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부담이 크고(DSR>70%, 18년 10월부터 시행되는 고DSR 규제)의 최저 비율 수준 감안, 금융자산 처분으로 금융부채 상환이 어려운(DTA>100%) 가구 기준으로 점검하였다. 다만 실물자산 처분 및 차입(담보대출 등) 등에 의한 자금조달은 제외하였다.

그림 1-14. 금융부채/금융자산 비율¹⁾



주: 1) 금융부채 보유가구 기준
 자료: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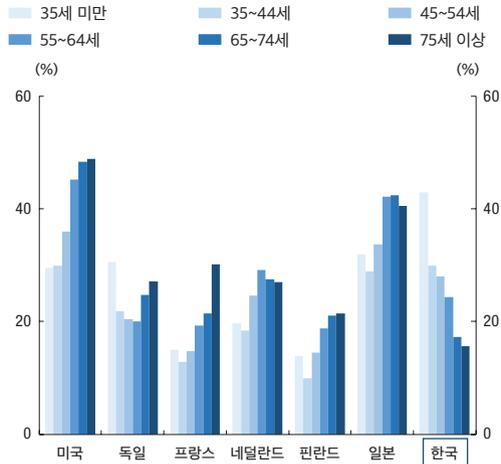
표 1-2. 소득·금융자산 측면에서의 채무대응능력 취약가구 부채 비중¹⁾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이상	70대 이상
소득 측면 DSR>70%(A)	19.6	20.2	22.7	23.7	(22.9)
금융자산 측면 DTA>100%(B)	69.4	71.4	69.3	81.2	(83.0)
소득·금융자산 측면 (A&B)	16.0	15.9	16.9	22.1	(21.5)

주: 1) 연령별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금융부채 대비
 자료: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주요국의 경우 대체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금융 자산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우리나라는 고연령층일수록 금융자산 비중이 낮아지고 그 수준도 이들 국가를 크게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15).

그림 1-15. 주요국과 금융자산/총자산 비중 비교¹⁾



주: 1) 평균값, 전체가구 기준
 자료: 가계금융 관련 조사
 (미국 16년, 독일·프랑스 등 17년, 일본 14년, 한국 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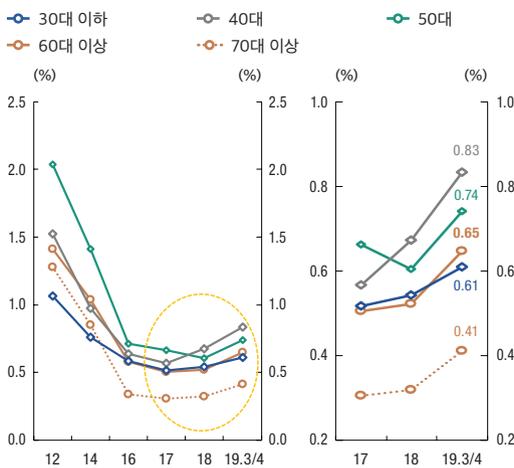
다. 취약부문의 건전성 저하 우려

고연령층 가계대출의 연체율은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상승 전환한 가운데 특히 채무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취약차주¹⁶⁾ 수와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16) 이는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하위 30%) 또는 저신용(7~10등급)인 차주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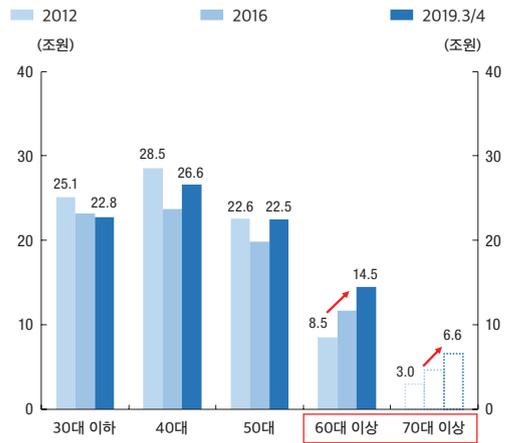
60대 이상의 연체율은 40~50대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2017년말 0.50%에서 2019년 3/4분기말 0.65%로 비교적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그림 I-16). 60대 이상의 취약차주 수¹⁷⁾는 2012년말 7.9만명에서 2019년 3/4분기말 16.2만명으로 2배¹⁸⁾ 정도 늘어났다. 대출금액도 다른 연령층과 달리 2013년 이후 가파른 증가세(12년말 8.5조원 → 19년 3/4분기말 14.5조원)를 지속하고 있다(그림 I-17).

그림 I-16. 가계대출 연체율¹⁾



주: 1) 금융기관 업무보고서상 집계된 연체율과 연체기간, 대출 및 연체 포괄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음에 유의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그림 I-17. 취약차주 대출규모¹⁾



주: 1) 기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5. 시사점

고연령층 가계부채가 인구고령화 등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총자산 규모, 연체율 수준 등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시스템 리스크 측면에서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소득에 비해 부채 수준이 높고 가계 자산이 실물자산에 편중된 상황에서 최근 건전성 저하 조짐도 일부 나타나고 있어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첫째, 고연령층 가계부채는 비은행 및 일시상환 방식 대출 비중이 높은 데다 최근 연체율이 상

	연령별 취약차주 수					(만명)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이상	70대 이상	
12년말	73.2	50.4	31.5	7.9	(1.6)	
16년말	61.0	43.7	30.3	11.6	(3.0)	
19.3/4분기말	50.9	41.1	31.2	16.2	(5.1)	

18) 이는 같은 기간중 60대 이상의 인구 증가속도(1.4배, 추계인구 기준)를 웃도는 수준이다.

승 전환하고 취약차주 수 및 대출액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 부채구조의 질적 개선과 함께 리스크 관리 강화에도 유의해야 한다. 이에 금융기관은 소득기반이 취약한 고연령차주의 실질적 채무상환능력 및 담보가치를 보다 적절하게 평가하고 만기연장시 분할상환대출로의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고연령층의 유동성 리스크를 완화하고 부동산가격 급변동에 따른 채무상환능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역모기지론 등 실물자산에 대한 유동화 제도를 적극 활성화¹⁹⁾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자산 유동화 제도 확대 과정에서 주택금융공사 등 특정 기관에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민간부문의 역모기지 활성화도 병행·추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고연령층의 디레버리징을 유도하기 위해 실물자산 처분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계의 실물자산 의존도를 낮추면서도 장수리스크(longevity risk)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²⁰⁾하고 이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제·금융교육 강화²¹⁾ 등을 통해 고연령층이 보유자산을 다양하게 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연령층의 채무상환능력 제고를 위해 소득여건 개선 방안을 다각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고연령층에 적합한 일자리를 확충하고 과잉경쟁 상태인 자영업²²⁾ 진출 유인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또한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을 보다 활성화²³⁾해야 할 것이다.

19)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연령 완화(가입연령: 60세 이상 → 55세 이상, 주택가격: 시가 9억원 → 공시가격 9억원) 등을 추진할 계획(19년 11월 발표)이다.

20) 다만 금융투자상품 개발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측면에서 불완전판매 및 불건전 영업행위를 예방하고 이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21) 2018년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한국은행·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0대(59.6점), 70대(54.2점)는 다른 연령층(40대 64.1점, 50대 63.1점)에 비해 금융이해력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2) 우리나라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포함) 비중은 2018년 25.1%로 OECD 평균(15.5%)을 크게 상회하였다.

23) 정부는 퇴직연금제도 도입 의무화, 퇴직연금 수령기간 장기화(10년 초과)시 연금소득세율 인하, 50세 이상의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 확대 등을 발표(19년 11월)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연금(의무가입 기준, 사적연금 포함)의 소득 대체율은 37.3%로 OECD 평균(49.0%)을 크게 하회한다(OECD, 19년 11월).